

언론중재의 정신

오진환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 중재위원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지방토론회가 대전, 대구에 이어 전주관광호텔에서 1983년 11월 15일 개최되었다. 전주지방의 언론계·학계·법조계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지방토론회는 이보환 전북중재부장의 사회로, 오진환 위원(한양대 교수)의 「언론중재의 정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있었는데 다음은 주제논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I. 머릿말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자기생존을 바탕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의 교양과 인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기중심적이기에 편견이 있고 스스로 구축한 사고의 틀이 자기경험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개성이 생기고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남여가 다르고 노소가 바른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창조해 낸 언론도 인간의 이러한 편향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언론의 내용과 질과 양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인이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항상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허위, 편파, 왜곡, 오보, 과장보도의 위험이 따르며 본의 아니게 비방, 중상, 조작 등의 논평을 할 수 있는 함정이 도처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존재하는 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문제는 존재한다. 문제는 없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항상 언론주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있다.

언론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 보도하고 논평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활동을 하기에 이질적인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추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기사와 논평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곧 옳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수십만부 또는 1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신문이나 수천만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에서는 기호도에 엄청난 변화를 예상해야 하며, 언론이 보도논평하는 내용에 대하여 격분하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고,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언론의 한계성은 스스로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것이 언론활동의 부수적 작용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는 마땅히 보상되어야 한다. 언론과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재하여 사건화하기 전에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곧 언론중재라 함은 만인이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3월 31일 발족한 이후 오늘날까지 152건을 처리하면서 언론중재의 참뜻이 중재사례를 통하여 입증되었고, 중재신청건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은 언론중재가 사회와 사회구성원을 위하여 유익했으며 중재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가 발족한 이래 2년 8개월동안 언론중재의 본질과 그 정신에 대하여 논의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 동안 언론침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반론권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판례나 경험을 많이 다루었고 논의의 쟁점으로 삼아왔으나, 왜 언론중재를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론중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별로 거론된 일이 없었다. 언론중재의 본질을 따져보고 그 정신을 정리하여 체계화시켜 본다는 것은 언론중재를 정치적 의미를 떠난 문화체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언론중재의 반성의 기회도 될 것이며, 철학적 성찰의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 언론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저변을 흐르는 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 인간과 언론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언론중재의 본질과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재사례에 나타난 언론중재의 정신

우리나라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총 152 건의 중재신청이 있었다. 최근 서정우 교수가 1983년 8월 31일까지 신청된 142건(9, 10월간에 10건 신청됨)을 분석하여 10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83년도 세미나 주제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이중 자료 몇 가지를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

(표 1)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언론보도의 문제점

('81.5.7~'83.8.31)

구 분 항 목	빈 도 (%)
허위보도	39 (28%)
편파적 일방보도	30 (21%)
왜곡보도	23 (16%)
오 보	21 (15%)
과장보도	12 (9%)
비방적 중상보도	6 (4%)
저작출처의 불명시	6 (4%)
조작적 보도	3 (2%)
악속불이행 *	2 (1%)
계	142 (100%)

*원고의 무단개작 또는 원고게재 위치의 문제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 마련되어 주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기본법의 법정신에 따라 언론의 공적 책임중 특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 3 조(언론의 공적 책임) ③항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음을 중재사례를 살펴보면 곧 알 수 있다. 신청인이 문제로 제기한내용도 허위보도, 편파적 보도, 왜곡보도, 오보, 과장보도 등이 절대다수(142 건중 125 건,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나 국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개인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은 주목되어져야 할 것이다.²⁾ 이는 곧 2년 8개월간의, 중재실적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설 자리를 스스로 마련했다는 것이며 언론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언론과 국민서로를 위해서도 반가운 일이라 생각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일방적인 보도, 왜곡, 오보, 과장보도에도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언론의 부주의나 불찰로 인하여 빚어진 침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과거에는 유야무야되던 것이 양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보도가 39 건(28%)에 이르고 편파적 일방보도가 30 건(21%), 왜곡보도 23 건(16%), 오보 21 건(15%), 과장보도 12 건(9%)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개인권익침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142 건의 중재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합의가 40 건(28%), 불성립이 46 건(32%), 취하가 49 건(36%), 기각 또는 각하가 7 건(4%)으로서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아 합의, 불성립, 취하가 각각 3분의 1 정도되고, 기각 또는 각하가 약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언론보도의 문제로 신청된 중재사례중 중재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보는 합의와 결렬된 상태의 불성립 그리고 중재신청이후 언론과 중재신청자가 따로 만나 합의를 하고 취하하는 양상으로 삼분되지만 실제로는 취하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언론침해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로 신청한 신청인이 중재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전체 사례중의 3분의 2에 가까운 수에 이른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다.

이러한 중재사례를 통해 볼 때 몇가지 부각되는 흐름이 있다. 첫째는 거의 모든 중재사례가 특정개인이나 이익단체의 문제로서 공익보다는 사익 중심적이었다. 두 번째는 언론보도가 거의 전부였으며 논평이나 사실, 만평이나 만화같은 언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된 일은 적었다는 사실이다. 보도도 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쓴 기사나 간접취재 또는 통신문게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³⁾ 세 번째는 경제적 손해나 손실을 공정한 보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였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등 비정치적인 사례가 거의 전부였다. 이는 해석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표 2> 연도별 중재처리 결과

('81. 5. 7~'83.8.31)

구분\내용	항 목	81년도	82년도	83년도	소 계
합의형태	합의후 정정기사 및 사과형태	6 (66.7%)	13 (68.4%)	8 (66.7%)	27 (67.5%)
	합의후 P.R.기사 및 보충보도형태	3 (33.3%)	6 (31.6%)	4 (33.3%)	13 (32.5%)
	소 계	9 (100%)	19 (100%)	12 (100%)	40 (100%)
불성립사유	피신청인 불출석	6 (50%)	9 (47%)	3 (20%)	18 (39%)
	신청인 불출석	1 (8%)	1 (6%)	-	2 (4%)
	합의결렬	5 (42%)	9 (47%)	12 (80%)	26 (57%)
	소 계	12 (100%)	19 (100%)	15 (100%)	46 (100%)
취하형태	자체정정보도후 취하	2 (10%)	-	-	2 (4%)
	P.R.기사게재 약속 에 의한 취하	-	9 (90%)	7 (36.8%)	16 (33%)
	조건없는 취하	18 (90%)	1 (10%)	12 (63.2%)	31 (63%)
	소 계	20 (100%)	10 (100%)	19 (100%)	49 (100%)
기각또는 각하		3 (42.8%)	2 (28.5%)	2 (28.5%)	7 (100%)
합 계		44 (30.9%)	50 (35.2%)	48 (33.8%)	142 (100%)

※서정자교수 논문의 (표)2,3,4,5 를 종합정리한 것임.

정치성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넷째는 해마다 중재신청수가 늘어나고 있어 언론중재가 문제를 사건화하여 법정으로 가기 전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기능이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며, 법정으로 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언론침해에 대한 문제가 천천히 양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언론피해자의 자각은 비록 수는 적으나 언론보도의 공정, 공평, 공명성을 촉구하고 언론 스스로 자각하고 자제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 지적한 이익중심, 보도위주, 비정치적, 양성화, 자각심제고 등의 언론중재사례의 흐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언론의 독선이나 국민의 권익침해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중앙일보의 죽어가는 여인의 사진보도를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사회의 공분을 언론중재위가 대신해서 시정권고한 것이기에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며, 사회를 모독하고 인간성을 짓밟는 일이 있을 때는 만인의 공분과 사회를 대신해서 앞으로도 시정권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⁴⁾ 비록 2년 8개월이라면 긴 세월은 아니나 언론중재위는 이 나라 언론풍토에 새로운 정확성과 공정성 추구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틀림이 없으며, 이는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는다. 중재의 경험은 152건의 사례를 낳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공익단체로서의 사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중재의 정신은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면과 국민은 언론의 침해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두려움없이 중재위를 통해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면과 국민은 언론의 침해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두려움없이 중재위를 통해 중재신청함으로써 언론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면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곧 국민들의 언론인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언론의 자율조정기능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I. 인간과 언론

이미 머리말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편견적이다. 유전적인 이유에서부터 교육이라는 자기수련과정과 성장을 통해 얻어지는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에 인간마다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늘날의 문화적 인간으로 진화하는데 까지 수백만년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후손을 교육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금 이순간에도 인간은 자아반성을 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쌓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계발하고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기발견과 개발과 발전의 노력이 있기에 인간은 무엇이 참되고, 어떤 것이 아름다우며, 어떻게 사는 길이 고이 사는 것인가를 깨닫고 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고민과 갈등을 겪어보지 않으면 존경 받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인간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꾸려나가는데 기여할 수가 없다.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자만이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을 이끌고 갈 수 있으며 존경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면 좋겠으나 인간은 개성이 다르고 품성이 다르기에 모두가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인간쓰레기같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언론도 인간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겪고, 이를 이겨낼 때 비로소 그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품위를 인정받으며 권위도 선다고 믿는다. 인격과 교양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언론의 품위와 권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격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언론도 있을 수 없다. 언론보도는 엄격히 따져 객관적일 수 없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인간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믿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불공평할 수도 있으며 본의 아니게 허위, 편파적인 일방보도, 왜곡, 오보, 과장보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다.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모르고 오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언론관과는 다를지 모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인간이 생태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합리하듯, 언론도 생리적으로 편견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인간과 언론은 인류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상황으로 변해 오기까지 숏한 시련을 넘어서야만 했었고, 지금도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언론중재이기도 하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산업혁명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정보생산과 정보확산의 대량전달매체(mass media)로 변모하였다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디오를 듣게 되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언론문화의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언론혁명(communication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정보체계는 언론의 이단계 이론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여론지도자(opinion leader)의 개념도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인간도 변하고 언론도 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 년이래 오늘날까지 20 년간 언론은 물론, 언론인도 변하였고 인간의 생활양상의 대표적인 의, 식, 주까지 크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생산수단, 유통구조, 소비성향까지 달라져 산업혁명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언론은 발행목적, 이론과 방법론까지 달라져 버렸고,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수신기의 대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까지 새로운 산업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달라지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언론기업의 구조까지 변하고 있다. 인간과 언론의 관계는 정보를 매체로 한 상호관계에서 정보가 생활화되고 앞으로는 생활자체가 정보와 밀착되어 정확한 정보 없이는 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까지 변하여 가고 있다. 「무관의 제왕」에서 「사회의 목탁」으로 변하고, 「사회의 거울」에서 「사회의 오목거울」로 변하면서 정론신문, 선정주의언론, 상업 또는 기업언론으로 체질이 바뀌었고, 오늘에 와서

공익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론은 200 여년 전의 고색창연한 자유주의 언론이론만을 주로 신봉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신성불가침한 천부적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언론을 나라와 거래를 위하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을 이해하려 했기에 생긴 일이라 믿는다.

언론은 인간이 창조한 위대한 문화적 유산이다. 그리고 언론은 오래오래 인간을 위해, 인간이 소속한 사회와 나라와 거래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이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거래를 보살피며, 이바지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는 의견이 갈라진다.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라는 물음을 한다면 언론은 거침없이 거래와 나라를 위하는 언론이라고 대답할 것이며 누구의 언론인가라고 묻는다면 역시 비슷한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경영인의 것이며, 국민들의 이해 속에서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이 언론에게 국민을 대변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되고 방송되는 것이 아니기에 (KBS 는 시청료를 받기에 사정이 다르지만) 국민인 인간과 언론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신문구독이나 방송시청으로 맺어지며 간접적으로 광고매상을 올려주는 것으로 관계 지워진다. 2 차적으로 언론이 제공하는 「창조」된 정보를 계속 공급 받음으로써 의식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언론과 인간의 관계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언론은 마침내 사회의 거대한 기구로 화했고, 때로는 언론의 대상인 인간의 개인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하의 언론이기에 상업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기업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은 강해지고 인간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언론중재는 이러한 인간과 언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언론의 인간권익침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동시 언론의 자율조정능력을 키워주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인간이 있기에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기에 언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간과 언론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은 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⁵⁾

IV. 언론중재의 본질과 정신

언론중재는 인간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의도로서 언론과 인간과의 갈등을 해소시켜 인간의 권익을 언론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언론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립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는데 참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중재 신청자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언론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는 언론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이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악세스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체계 속의 언론체계로서 사회운영과 국가경영을 위해 언론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비록 인간의 권익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인 공익과 상충할 때, 개인의 권익이 때로는 침해되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어 언론중재가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⁶⁾ 그러나 인간과 언론의 불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중재활동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중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는 언론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활동을 위해 그리고 언론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언론체계의 사회적 위치를 다지고 공익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중재사례를 통해 본 중재의 정신과 인간과 언론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사상적 흐름이나 정신이 분명히 깃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언론중재를 위해 몇 가지 지향적 좌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결론으로 엮어 보고자 한다.

1. 보완의 정신

언론중재는 인간과 언론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해 보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위, 편파, 왜곡, 오보, 과장보도는 결국은 인간의 실수나 상황판단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생기는 종류의 것이다. 언론이 허위인 줄 알면서 보도하지는 않으며 고의로 편파적으로 일방보도 하거나 왜곡보도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오보는 마치 인쇄물에 오자가 나오듯이 보도활동에서 가끔 생기는 언론활동의 부산물이다.

위대한 기자는 큰 오보를 했을 때 비로소 대기자로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은 저절로 생겨난 말이 아니라 언론경험의 소산이다. 마치 자동차사고를 내고 나서야 운전엔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보 없는 언론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함을 보완해 준다는 정신이 중재활동에서 우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합의의 정신

중재는 언론과 중재신청자간에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서 빚어진다. 옳다고 믿고 있으나 옳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양지에서 보는 경우와 음지에서 보는 경우는 크게 다르며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버린다. 하물며 개성이 다른 인간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다를 수 밖에 없다. 한 건물을 보는데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복잡한 사회현상과 인간사를 다루는데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물의 올바른 관찰을 다방면에서 해야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올바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듯이 언론과 인간간에 생기는 견해의 차이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비록 관점에 따라 한개의 사실이 달리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사실은 결국 하나이다. 인간의 지각현상으로 인해 바로 보았던 또는 잘못 보았던 간에 하나의 사실을 두고쟁의가 벌어지게 된다. 중재를 통해 당사자는 사실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고 듣게 되며, 사실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에 견해의 차이는 좁혀지고 결국 견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합의는 입간의 양식과 지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쳐 나가려는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빛을 보게 된다. 합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상호이해를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언론이나 중재신청인이 발휘하는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3. 회복의 정신

일단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실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잘못으로 인해 비워진 곳은 채워주어야 한다. 허위나 왜곡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는 언론활동을 통해 메꾸어 주려는 회복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는 대화의 장을 통해 이루어지나 결국문제 해결의 열쇠는 언론이 쥐고 있다. 이론상 원상회복은 언론침해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 주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언론이 잘못하였을 때 성실하게 이를 즉각 시정해 준다는 것은 언론의 품격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성실성을 통해 신뢰를 얻으며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4. 약자보호의 정신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예외는 있으나 이미 거론한 142 건의 중재신청사례의 총신청인 78 명중, 일반시민이 30 명(38.5%), 중소기업인이 11 명(14.1%), 군소사회단체장이 9 명(11.5%)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교사, 소상인, 하위공무원, 학부모, 연예인, 학생, 농민들로서 이들은 언론과 비교할 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으로 보아 약자라고 보아도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는 이들 약자의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 외에도 법이 정한 공익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권익이 언론으로 인하여 침해 당해서도 안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중재로 인해 침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꾸준히 언론중재를 하여나가면 사례는 계속 생길 것이고, 사례를 통한 새로운 한국적인 언론중재의 규범이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것으로 낙관한다.

V. 맺는 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발족하였기에 언론이 부정적으로 언론중재를 보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충고를 해주면 달가와 하지 않듯이 언론도 언론의 잘못을 따지고 가리려고 하면 유쾌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은 범인과는 달리 공익성을 띠고, 사람으로 치면 소인배가 아닌 대인의 품격을 지니고 사회현상의 잘잘못을 지적하면서 보도·논평하는 기관이기에 언론중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100 년의 언론사를 통해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세계상위수준의 언론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어깨를 겨루는 실력을 지닌 한국언론은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중재신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는 언론의 자유와는 사실상 별로 관계가 없는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언론중재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주>

1) 서정우, "중재사례를 통해 본 보도윤리", 언론중재위원회 83년도 세미나 주제논문, 1983년 10월 21, 설악파크호텔, 31-57면

2) 중재신청건수는 142건이나 신청인은 78명이다. 한사람이 여러 매체를 중재신청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3) 지방주재나 서울주재 기자없이 연합통신의 기사를 전재해야 하기에, 보도하는 언론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4) 언론중재위원회는 1983년 2월 21일 위원총회를 열어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사진을 게재한 중앙일보(1983. 1.21 11면), 선데이서울(1983. 1.30. 20-21면), 주간중앙(1983. 1.30. 20-21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바 있다.

5)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위치나 의미를 논할 때 「인간과 언론」이라는 시각에서 보다 「언론과 정권, 정부, 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6) 공인의 사생활보도는 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 건국대학교 졸, 미국 아이오와대 대학원졸(신문학박사)

□ 한양대학교 기획조정 처장(현)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언론중재 위원회 위원